

탄핵 정국 속 한미 동맹 유지 필요

글로벌에세이

최성주

반기문재단 외교안보
실장·전 주폴란드 대사



트럼프의 재등장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11월 5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트럼프 2기의 정책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동맹조차도 거래적 관점에서 상대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집권 1기 당시 북한 김정 은과의 직거래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가진 적이 있는 만큼, 우리의 능 동적인 적시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 이 런 중차대한 시점에, 12월 3일 청천벽력 과도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절 체절명의 골든타임에 이런 불상사가 터 지니,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올해 대선 유세 중에,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이라 불렀다. '잘 사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배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이래 70년 넘게 동맹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국을 단순한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거다. 우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및 동맹에 대한 상거래적 접근, 그리고 유 엔 등 다자외교 무시 정책을 이미 경험했 다. 트럼프 1기를 잘 들여다보면 트럼프 2기의 진행 방향이 예상된다. 즉, '데자 뷔(deja-vu)'란 얘기다. 전통적인 동맹

을 경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하 면서, 유엔 등 다자협력을 무시하는 태 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정 세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1기와 2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전쟁이 없었 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크라 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전쟁 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모색해야 할 것이 다. 둘째, 트럼프 1기 이후 바이든 행정 부 하에서도 미-중 간 전방위적인 대결 이 첨예화되었지만, 트럼프 2기는 중국 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디커플링 (decoupling) 정책 등을 통해 더욱 강 경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한반 도 정책 추이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생존 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난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 후,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집요하 게 추구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올 6 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준(準)군사동맹을 체결하고, 무기 제공은 물론, 대규모 파병 등 불법 적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러-북 밀착은 김정은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 을 상대할 때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 11월말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으로는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상대로 일종의 '밀고 당기는' 게임을 시 작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내적 으로 일대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외국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이 줄어들기 최소

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2기 대응을 본격 준비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쟁으로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통 탄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 비의 대폭 증액을 요청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핵 자강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등 반대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한-미 정상 통화 당시, 트 럼프 당선인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 분야 협력을 유호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 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도 확보하도록 한다. 김정은과의 친분관계를 수시로 언급하 는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이 미 지명하는 등 김정은과 직거래를 시도 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탄핵 정국 하 에서 비상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동맹은 국가 간의 일반적인 우호협력 관계보다 각별하고 또한 전략적이다. 한 미 동맹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군사동맹이다. 동맹국은 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취지 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동맹이란 '상 대국이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관계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것처럼,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 호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익에 엄청난 해악을 끼 쳤다. 특히, 우리의 장래 생존과 직결되 는 한미동맹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서 라도, 현재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

社說

민주당, 뼈 깎는 반성으로 도덕성 살려야

지도부 책임 결코 작지 않아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잇따른 기초·광역의원의 일탈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의 사 과가 형식적인 면피성 사과가 아니라 면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뒤따라 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방자치체를 구성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 다는 이들의 고언에 공감한다.

당장 광주 서구의회 한 의원은 지난 12월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 에서 자신의 직의를 마친 직후 'XXX 없이'라는 욕설을 했다. 또 다른 서구 의회의원은 지난달 29일 주민자치위 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 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 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 다.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지난 16일 오후 광주 도심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즐겨 도마 위에 올랐다. 극 히 일부였지만 욕설과 성희롱, 유흥주 점 출입 등이 난무하는 지방의회의 일 탈과 무너진 도덕성, 품위 잃은 처신

이 안타깝다. 지방의회 의원의 일탈과 비리는 오래 전부터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자질에 대한 지적도 심심치 않게 불거 졌다. 토착 비리나 외유성 해외연수, 막말,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등의 파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청탁이 드러 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무추진 비를 유용했다는 논란도 빚어졌다. 대 한민국을 이끌겠다면서도 무능하고 파렴치한 행태에 매몰됐던 일부 정치 지도자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지방분 권 시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 이 더욱 커지는 현실과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함량 미달이나 비리 등이 일산인 지방의회라면 굳이 지역민의 세금을 들 여 의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민주당은 지방의회가 성숙한 풀뿌리 민주 주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대오각 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 책도 내놔야 한다. 지금 상황에 이른 데는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 결코 작 지 않다. 도덕성을 되살리려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

'임비 시대' 열어야 할 광주 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 광산구 삼거동 결정

우여곡절 끝에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최종입지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이 결정됐다. 지난 2022년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를 추진 한 이후 2년여만이다. 환경부 검토과 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설치장 소는 내년이 결정된다. 광주시 자원회 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6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 인 결과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 동'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삼거동은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 할 수 있는 산업단지(빛그린·미래차) 가 인접해 있는 점이 반영됐다. 또 부 지 경계를 기준으로 왕복 4차선 도로 에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도 타 후보지는 개발제한구역인 반면 삼거동은 관리지역으로 행정절차를 1~2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후 환경 부에 입지 후보지를 제출한 뒤 6~7개 월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 종 입지 후보지로 확정된다.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총사업비 3240억원

을 들여 하루 6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아직 정부 심사 절차가 남아있지만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는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인근 지역 민의 반발도 예상돼 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자 원회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건립·시 운전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1~2년 안 에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자원회수 시설은 '남비' 인식이 크다. 하지만 세 계적인 자원회수시설은 주민들이 우 려하는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 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건 축물로 자리 잡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 친환경소각장 '아 마케르 바케'는 인공스키장을 만들어 연간 5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했 고, 불과 2km밖 왕궁에서 여왕이 창문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굴뚝에서 나 오는 연기를 본다고 한다. 아마케르바 케는 덴마크 정부가 주민들에게 남비 시설이 아닌 임비 시설임을 확인시킨 결과물이다. 광주시도 주민 합의를 이 끌어내기 위해서는 '임비 시대'를 열 어갈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현지시각)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헝가리 경찰 대테러 부대원들이 장갑 차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 주변을 경 비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중국 송나라 때 손광현이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북몽쇄언(北夢蓼言)'의 기록에 따르면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진사 시험에도 합격할 만큼 학문과 재 능이 뛰어났으나 출세욕이 지나쳐 뒷사람에게 아첨하기를 즐겨했다. 당시의 권력자가 습작한 시(詩)에 대하여 이태 백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운이 돈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권력자가 잔치를 벌였 다. 거나하게 취한 권력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누가 이 채찍으로 한번 맞아 볼 텐가?" 왕광원은 조금 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렸다. 권력자는 채찍을 휘둘 렸다. 왕광원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 려 웃으며 듣기 좋은 말로 권력자의 비위를 맞췄다.

이를 본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나?"고 묻자 왕광원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 손해 볼 것 없잖나"고 했다. 이를 두 고 당시 사람들이 "잡안후여갑(獶顏厚如甲·부끄러운 얼굴 두껍기가 쇠와 같아) 부지불치(不知羞恥·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데서 철면피(鐵面皮)가 유래했다.

'쇠처럼 두꺼운 낮가죽'이라는 뜻의 철면피는 뽀뽀스럽



고 엄지없는 사람을 이른다. 같은 말로는 '후안무치(厚顏無恥)'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왕광원 못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지 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에는 인의는 찾아볼 수 없 고 후안무치만이 보인다. 지난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 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 성으로 내세우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대통령의 행태는 후안무치로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적극 막지 못하고 동 조한 국무위원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당 의원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후안무치한 자 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루빨리 뿌리뽑히고 부끄러움을 아 는 인의(仁義) 정치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